

광주 민간공원 의혹 檢 수사 어디까지

공무원 3명 기소 이어 정무특보실도 조사 지난 주 사업자 선정 건설사까지 압수수색 수사 확대로 공원 개발사업 차질 불가피

광주 민간공원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무원에 대한 수사에 이어 민간공원 사업자로 선정된 건설사에 대한 수사까지 확대되면서 수사가 어느 선까지 이뤄지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지난 21일 오전 광주에 위치한 A업체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A업체에서 민간공원 사업 관련 서류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A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우선협상 대상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특혜의혹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간공원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수사가 언제쯤 마무리

될지, 공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4월 광주경실련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은 검찰은 광주시 감사위가 민간공원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직후 특정감사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나 압력, 정보 유출이 있었는지, 광주도시공사가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도 자진반납한 배경과 그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그동안은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 등 공무원에 대해 수사력이 집중됐었다. 광주시청을 2차례, 광주도시공사 1차례, 고위 간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광주시 고위간부 3명에 대해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3명의 시 고위간부 중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장은 구속됐지만,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감사위원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되면서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민간 건설업체로까지 수사를 확대한 데에는 행정부시장과 감사위원장의 영장 재청구를 위한 보강 수사 차원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광주시장의 최측근인 정무특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주목을 끈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국장급 시 간부의 꼬리짜르기로 끝내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광주시장의 최종책임자인 광주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민간공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또다른 선정 업체 관계자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검찰의 수사는 당분간 공무원과 업체 사이에 이루어진 '검은 거래'를 밝히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광주시 고위간부 3명이 공모해 유사사업 실적을 부당하게 변경하거나 우선협상자 변경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행정부시장과 감사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물론 광주시장에 대한 수사도 가시화 될 전망이다.

광주시 등 기관에 이에 업체까지 수사가 진행되면서 민간공원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간공원 사업의 경우 내년 6월 말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직 협의체 결도 안된 상태다.

여기에 시민단체 등은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업체와의 업무협약 체결 등을 반대하고 있다.

광주시가 연말 안에 조기에 협약 체결을 완료할 방침이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소송 등이 이어질 수도 있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난관에 마주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11월8일 민간공원 2단계 사업 5개 공원 6개 지구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하지만 일부 탈락업체들의 이의 제기과 평가 과정의 불공정성, 선정 결과 사전 유출 등의 논란이 일었다.

시 감사위원회가 특정감사에 착수했고, 일부 부적절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다.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자진 반납하면서 2순위인 (주)한양이 선정됐다. 중앙공원 2지구는 금호산업(주)에서 (주)한양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뀌었다.

광주 경실련은 이같은 우선협상대상자 변경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다며 광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검찰은 7개월 동안 수사를 벌이고 있다.

만취 여성 부축하는 척 집안 들어가려한 30대

새벽시간 술에 취한 여성을 뒤따라가 추행하고 집에 침입하려고 한 30대가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검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19일 오전 0시4분쯤 광주 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술에 취한 B씨(28·여)를 부축한다며 추행하고 이후 B씨 집 현관문을 열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B씨를 뒤따라간 A씨는 집에 가려는 B씨를 부축한다는 이유로 신체를 접촉하고, B씨 집 현관문에 손가락을 넣어 문 닫는 것을 제지했다. A씨는 "잠잘 곳이 없다. 재워달라"며 3분 동안 B씨 집 문을 잡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철거공사 수주해달라" 조합장에 1억 건넨 업자

현장철거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며 금품을 전달한 업체와 재개발 총회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일명 '재개발건설팅' 관계자가 각각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황성욱 판사는 제3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업체대표 A씨(49)와 컨설팅 관계자 B씨(53)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추징금 1억원과 240시간의 봉사활동을 각각 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초순쯤 광주의 한 식당에서 광주의 모 재개발 조합장 C씨에게 현장철거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전달했다.

C씨는 다음날 오전 현금 1억원을 A씨에게 다시 돌려줬다. A씨는 C씨와 친분이 있는 B씨를 통해 C씨에게 금품을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담배꽂초 시비 러시아인 살해 태국인 2명 징역형

'담배꽂초 시비'로 러시아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3명이 중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씨(33)와 B씨(32)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C씨(30)에 대해서는 징역 12년을 판결했다.

A씨 등은 지난 8월28일 오후 9시50분쯤 광주 광산구 산정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러시아 국적 D씨(22)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이틀 전 B씨가 원룸 건물 3층에서 D씨 쪽으로 던진 담배꽂초로 인해 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하 직원 차에 감금하고 강제추행 소방관 실형

부하 직원을 차에 감금하고 강제로 추행한 소방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강제추행과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6일 오후 10시쯤 전남의 한 지자체 앞에 주차해 놓은 부하직원 B씨의 차량 안에서 B씨의 어깨를 만지거나 허리를 잡아 껴안으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차량에 타기 전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B씨의 하차 요청을 무시한 채 13분 동안 차량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전남의 모 소방서 팀장과 팀원으로 상하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사업법 개정안 반대 집회.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회원들이 24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담배사업법 개정안 반대 집회에서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권고를 규탄하고 있다.

구례군 공무원노조, 군수실 점거 농성 하루만에 '해제'

구례군과 공무원 노동조합이 임금협상에 잠정합의 하면서 하루만에 군수실 점거농성이 해제됐다.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구례지부와 구례군 관계자에 따르면 구례군청과 노조간 임금협상이 잠정합의되면서 23일 오후 6시30분

군수실에서 퇴실했다.

다만 구체적인 임금인상액은 25일 합의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구례군 공무원 노조는 지난 1일부터 2018년, 2019년치 임금 소급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22일에는 김순호 군수와

노조측의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노조원 20여명이 김 군수가 퇴근한 틈을 타 "김 군수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군수실에서 점거농성을 벌였다.

노조측은 이날 오후 6시부터 김 군수와 임금협상을 벌였으나 인상

폭을 좁이지 못한채 협상이 결렬되자 군수가 퇴근한 이후에도 김 군수가 면담 도중 나갔으므로 계속 기다리겠다"면서 군수실을 점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구례지부는 현재 공무원(환경미화원, 행정정보, 수도검침원, 도로보수원, 간호보조원 등) 공무원 229명 중 128명이 활동 중이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